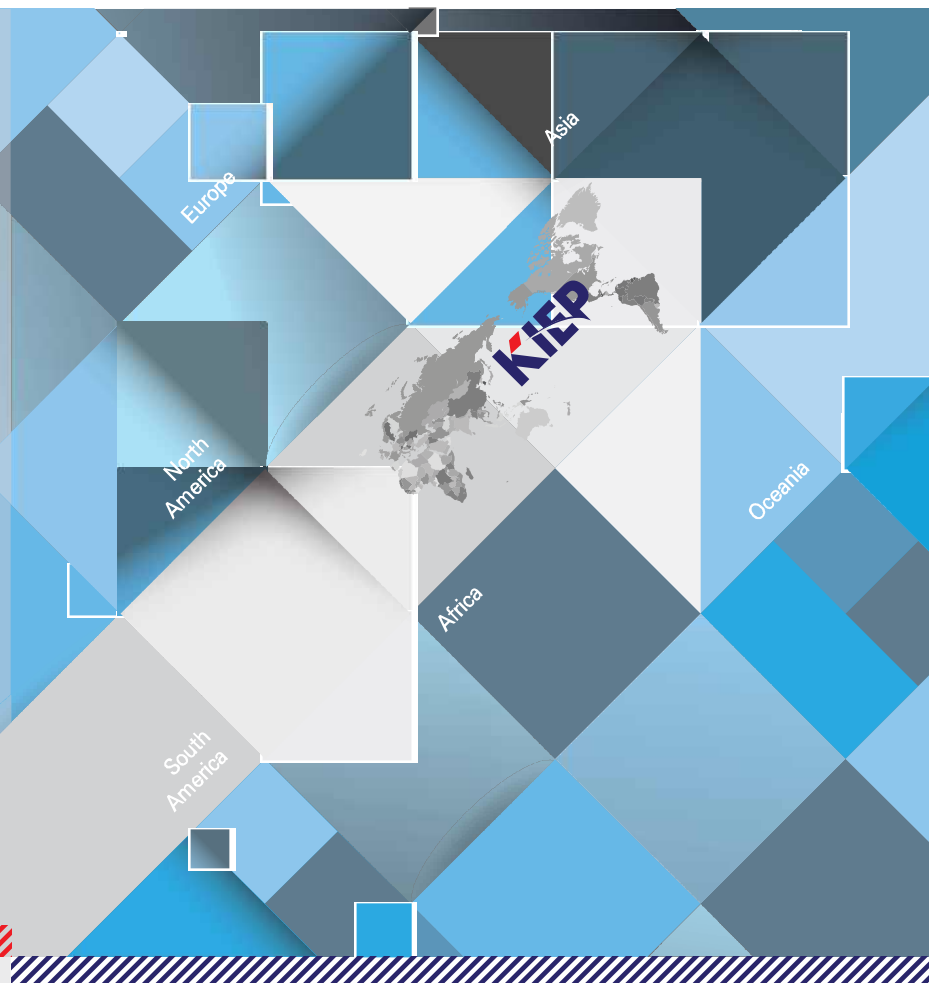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24

2018년 10월 8일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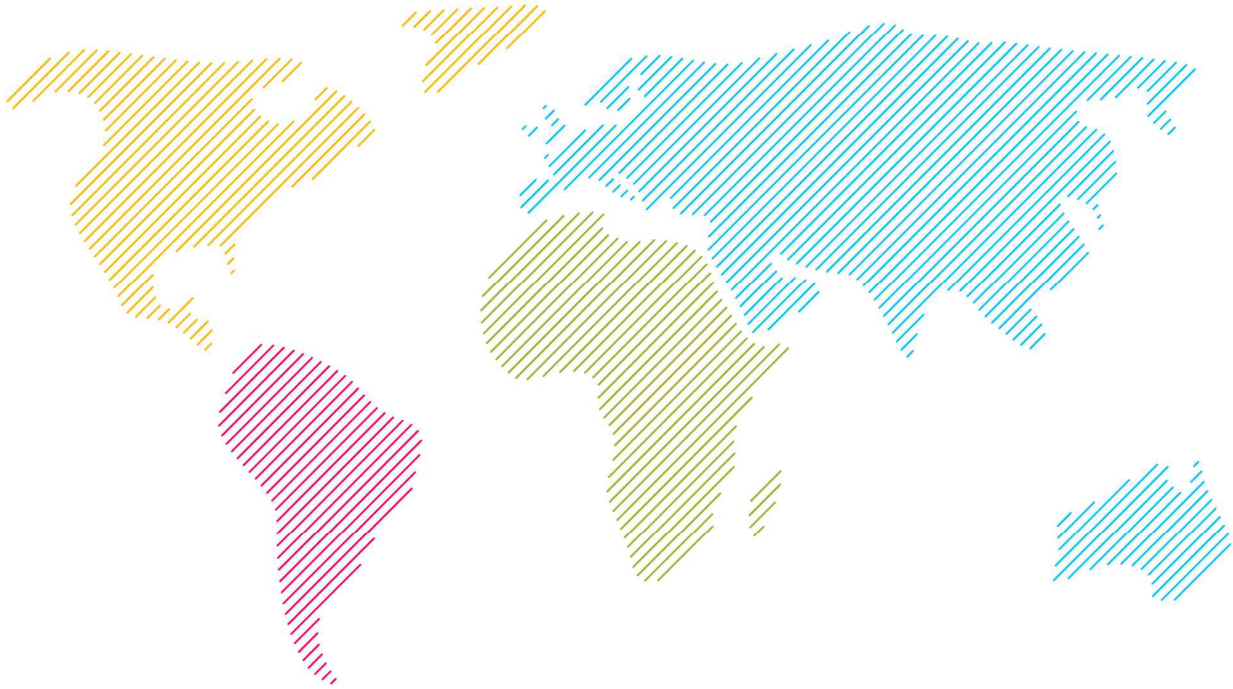
이정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044-414-1084)

김범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bhkim@kiep.go.kr, 044-414-1041)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요약

- ▶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확보를 위하여 올해 ‘북·러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북·러 관계에 대한 조망이 필요함.
 - 북·러 수교 70주년 기념일(2018.10.12)을 맞이하여 올해 초부터 북한과 러시아는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공동기념행사 개최와 한반도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옴.
- ▶ 소련 해체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북·러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건 조성 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대북관계 강화 유인: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한 극동지역 경제발전, 북한의 대중국 정치적·경제적 의존, 대북한 영향력 확대 등
 - 북한의 대러관계 강화 유인: UN의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 탈피, 미국의 대북강경책 완화 및 동북아시아 패권주의 확대 견제를 위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유지, 러시아와 경협을 통한 전력, 에너지, 식량 등 경제난 문제 해결 등
- ▶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한과 에너지, 전력, 철도, 항만, 해양,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 경제 분야 협력의 기틀을 강화하고 있음.
 - 북·러 간 주요 경협사업은 향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추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과의 경협으로 발전 가능성 다대
 - 북·러 두만강 접경지역에 자동차 전용 교량 건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가 북한을 포함한 18개국을 대상으로 전자비자제도를 시행(2017.8)함에 따라 북·러 간 관광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 2018년 하반기의 북·러 수교 70주년 기념행사와 북·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북·중(3.25~28, 5.7~8), 남·북(4.27, 5.26), 한·중·일(5.9), 북·미(6.12), 한·러(6.22), 중·러(9.13) 간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북·러 70주년인 올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푸틴 4기 행정부 출범으로 ‘신동방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한 비핵화 의지 표출,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대북제재 완화 시 중단된 북·러 경협의 재개 및 확대 발전 가능성이 큼.
-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시 철도·에너지(가스)·전력 분야에서 남·북·러, 남·북·중·러 다자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정치·외교적 불안요소 관리, 상이한 법·제도 통합) 마련이 필요함.
 - 남·북 간 경협 논의 추진과 병행하여 중국, 러시아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 선행한 북한과의 경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추가 공동연구 추진 필요



차 례

1. 서론
2. 북·러 관계 개관
3. 북·러 주요 경제 이슈
 - 가. 대외무역
 - 나. 경제협력
 - 다. 북한 노동자 파견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남·북(18.4.27, 18.5.26, 18.9.19), 북·중(18.3.26, 18.5.8, 18.6.19), 북·미(18.6.12)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음.

- 미국의 대북한 先비핵화 이행 촉구, 미·중 통상분쟁, 북·일 고위급 접촉,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 개최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바, 북한과 주변국의 대외경제관계 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2018년은 '북·러 수교 70주년'(18.10.12)이 되는 해로 북·러 관계 변화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함.

-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경우, 북·러가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1/4분기에는 △ 북한노동당창건 73주년(18.10.10) △ 북·러 수교 70주년(18.10.12) 등 행사가 맞물리면서 북·러 정상회담과 양국간 대규모 기념행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 통상적으로 북·러 수교 기념행사는 양측 고위인사가 참석한 연회 형태로 진행되었음.
-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다만 비핵화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고 미·중 통상분쟁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면서 관련 행사가 소규모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러시아는 정치·군사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북·러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경제교류 규모에 비해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큰 상황임.
- 현재 북·러 간 대외경제협력은 대부분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이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정치·군사적으로 공조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으나, 북한정권 교체나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 추후 비핵화 논의 진전에 따라 러시아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 북·러 관계 개관

■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 우방이며 이는 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 기인함.

-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16.9km(북·중 국경 1,416km의 1/84, 중·러 국경 4,374km의 1/259 수준)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러시아에게 북한은 태평양 진출을 위한 관문이며,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게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임.

- 특히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북·중·러 3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우위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위상 확보와 아태지역 진출 시도 추진
-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도 유라시아 대륙과의 항만,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연결에 방점을 두고 있어 북·러와의 협력이 절실함.
-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하나로 잇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남·북·러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동시에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북·러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북한은 1948년 10월 12일 소련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사회주의 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소련의 정부조직, 사회·경제 체계를 자체적으로 변형하여 도입함.
 - 소련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인 동시에 주요 공여국
 - 북한은 러시아와 과학기술과 사회체제, 이념 측면에서 동질성 보유
- [1970~8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러 간에 등거리외교(시계추외교)를 추진하였으나, 북한 무역 중 러시아의 비중은 여전히 평균 25~50%를 차지하였음.
- [199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가 사회주의 우호 가격을 폐지하고 경화결재(hard currency)를 결정하면서 북·러 경제관계가 악화되었으며, 한국의 북방정책으로 한·러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북·러 관계는 소원해짐.
 - 1990년 북·(구)소 무역액은 약 22억 달러로 북한 총무역 대비 53.3%를 차지함. 북한 발전의 70%, 화학비료의 50%, 제철의 40%가 소련의 지원으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짐.¹⁾
 - 1995년 북·러 교역액은 약 8,300만 달러로 1990년 대비 대폭 감소²⁾
- [2000년대] 푸틴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러 관계 개선이 시도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으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2000. 7)하였으며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모스크바(2001. 8),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2002. 8)를 답방
 - 북·러 간 제분야 관계 개선 및 경제교류협력 강화에 방점을 둔 새로운 <<북·러 우호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 [표 1 참고]
 - 양 정상은 전기 에너지 분야의 공동 합작 회사를 재설립하고, 남·북·러 철도 연결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비공식으로 러시아 올란우데를 방문하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6자 회담 재개와 경협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북·러 경협이 재추진되었음.
- [2012~14년] 북·러 간 경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비적인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부분의 관계가 중단됨.
 - 2012년 9월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 탕감에 합의
 - 2013년 2월 러시아는 상호이익을 원칙으로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기로 결정³⁾

1) Leshakov, P.S.(2005), Russia's role in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DPRK, New Horizons, p. 201.

2) Leshakov, P.S.(2005), Russia's role in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DPRK, New Horizons, p. 201.

3) "84. Russia seeks to maintain friendly and neighborly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nd to better use the potential of those relationships to speed up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inter-Korean political dialogue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are fundamental to peace, stability and

- 2014년 3월 갈루시가 극동개발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측 무역 규모를 2020년까지 현재 북한 평균 무역액(약 60억 달러)의 16.7%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⁴⁾
- 2014년 4월 극동의 유리 트루트네프가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경협과 무역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0대의 소방차를 기증
- 같은 해 러시아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50,000톤의 밀을 지원⁵⁾
- [2015년] 북·러 기업협의회가 발족하였으나, 대북제재로 후속 협의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 [2016년]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북·러 관계가 위축되기는 했으나 제재 외 품목 교역,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논의는 지속되고 있음.
- 북·러 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UN 결의안에 대한 반대/이의 제기 등 국제사회에서 공조
- 구체적으로 북한은 UN이 발의한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거부하였고,⁶⁾ 러시아는 북한 인권문제 및 핵·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수차례의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대

표 1. 북·러,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비교

구분	북·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북·러 우호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	북·중 우호협력상호조약
체결시기	1961.7.6	2000.2.9	1961.7.11
조항	6개 조항	12개 조항	7개 조항
유효기간	10년	10년	쌍방향의
기간연장	만료기간 1년 전 효력중지에 관한 의향을 통고하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이후 5년씩 자동연장	만료기간 1년 전 효력중지에 관한 의향을 통고하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이후 5년씩 자동연장	-
주요 내용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았을 경우 자동군사개입 및 기타 원조 제공	국가주권의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원칙, 영토보전 원칙에 입각한 우호관계 지속발전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았을 경우 자동군사개입 및 기타 원조 제공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체결, 행동 및 조치 불참가	군비 축소, 세계평화와 안전보장 노력,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 발생 시 쌍방은 즉각 상호접촉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체결, 행동 및 조치 불참가
	양국 이익과 관련한 국제문제 상호 협의	상호관심사 정기적 협의 및 제3국과의 조약, 협정체결 등 불참여	양국 이익과 관련한 국제문제 상호 협의
	경제,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원조 제공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유지에 기여함을 인정	경제,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원조 제공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와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부합됨을 인정	무역, 경제, 과학, 기술발전 적극 협력, 상호협력 촉진 및 투자 장려 협정 체결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와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부합됨을 인정
	-	제분야에서 다방면의 협력 추진 합의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 경주
	-	도시 간 자매결연 등 다각적 교류 장려	-
	-	상대국의 문화 및 언어 습득	-
실효여부	-	조직범죄, 테러리즘 근절 협력	-
	-	제3국 이익을 저해하는 목적 추구 금지	-
	1996년 폐기	유효	유효

자료: 저자 작성.

security in the region. Russia has always been in favor of the non-nuclear statu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ill fully support a step-by-step progress in the area based on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4) 데일리NK(2014. 6. 9).

5) 노컷뉴스(2014. 11. 6).

6) 박정민(2015), p. 242.

■ 북한은 러시아와의 대외관계에 있어 경제협력, 국제사회의 정치외교적 지지 등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정치적 측면] 대북제재와 테러지원국 지정 등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국제고립화를 탈피하기 위하여 오랜 우방으로 북한을 잘 이해하고 있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등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지원을 필요로 함.
 - 북한은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주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 우방이라는 명분하에 관계를 개선·유지하는 외교전략 추진
 - 러시아와의 정치·군사적 협력은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
- [경제적 측면] 경제협력은 규모가 미미하여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극동러시아 건설업(현장노동), 임업(벌목공), 어업(수산물가공)에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식량·에너지 공급, 노후 생산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 영공 통과 허용, 러시아 선박의 북한 해역(동해)에서의 어로활동 허가(조업권) 등을 통한 외화벌이 극대화
 -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화력발전용 유연탄과 정제유 수입
 - 러시아의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KR(한반도종단철도) 연결을 통해 시베리아극동지역을 물류허브로 발전시키는 정책에 부분적으로 협력하면서 2014년에는 북한 내 철도의 신설 및 개·보수를 통한 현대화 추진
 - 2014년 북한은 극동 하바롭스크에 1만 헥타르의 농지를 임대하여 축산업과 채소 경작을 할 계획임을 발표⁷⁾
- [군사적 측면] 군사동맹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 소련의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재래식 무기의 부품 조달이 필요한 상황임.
 - 북한은 나진항구 장기 사용권 임대, 가스관 사업 등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북한 재래식 무기부품 및 신무기, 무기 관련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외관계에 있어 극동지역의 산업생산을 위한 노동자 수급, 동북아에 대한 정치외교적 입지 확대 등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북한을 경유한 남한으로의 가스관·철도·전기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동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과의 시베리아 철도 연결, 러시아의 대한국 송전·송유관 연결 등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
 - 다만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가 한국의 극동러시아 투자를 축소시킬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 경제적으로 극동러시아는 산업활동을 위해 북한 노동자가 절실한 상황임.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중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비자발급 중지 및 갱신 금지 조항은 극동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극동러시아는 주민이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인구 공동화 현상 경험
 - 2000년대 초반 극동지역 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중국 노동자를 대거 유입하였으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관련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하기 시작
 - 2000년대 후반부터 대거 유입된 북한 노동자들은 극동지역의 산업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시작
 - 2016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 비자발급이 금지되면서 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안으로 인도 노동자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은 상황

7) 연합뉴스(2014. 11. 14).

- 또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을 지지하는 조치를 취함.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유지와 한국의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유엔 안보리 UNSCR 2270호 결의 과정에서 북·러 경제협력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임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음.
 - 그 외에도 UNSCR 2371호 결의 과정에서 북한이 발사 실험한 미사일을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대북제재 결의안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 담당
 - 북·미 정상회담(2018. 6. 12) 이후 중국과 함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
- 러시아는 남북문제가 동북아시아 안정에 저해될 경우 극동러시아에 대한 영향 최소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관련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임.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 일본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며 군비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해결 노력 및 다자간 안보협의체 등 창설 주장

3. 북·러 주요 경제관계 이슈

가. 대외무역

■ 북·러 무역 규모 변화가 양측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무역이 국제정치와 결부될 경우 상징성이 달라지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

- 최근 사례로 대북제재 기간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제유를 들 수 있음.
 - 대북제재로 북한의 원유 수입이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
 - 이를 근거로 최근 미국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러시아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러 무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대북제재가 대부분 북·중 무역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 2017년 북·러 총 무역액은 7,793만 달러(전년대비 1.4% 증가), 북한의 대러 수출은 372만 달러(전년대비 57.7% 감소), 수입은 7,421만 달러(전년대비 9.1% 증가)임.⁸⁾
- 다만 북한의 상대국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동일함.
-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2017년 대러시아 수산물(HS 03) 수출은 감소(281만 달러 규모)하였으나 북한의 광물성 연료(HS 27) 수입 증가(409만 달러 규모)가 이를 상쇄함.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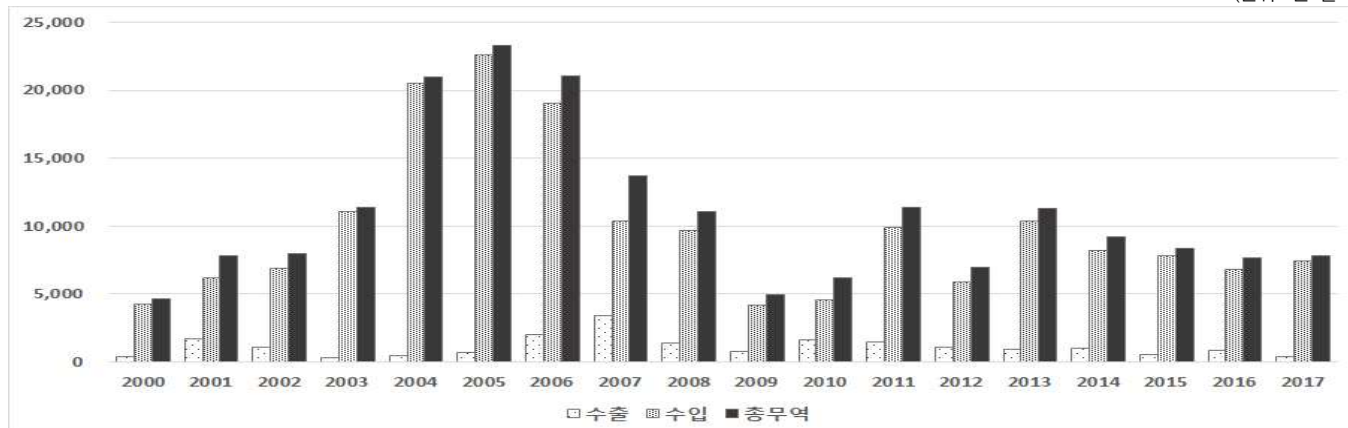
8) 북·러 간 무역통계자료는 ITC, KITA, KOTRA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출처 간 규모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긴 시계열을 일관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ITC의 통계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음.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에서는 러시아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of Russia statistics)에서 원자료를 제공받아 북·러 간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북한이 러시아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북·러 무역 규모를 고려하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기준¹⁰⁾ 북한 대외무역에서 1위 교역국인 중국은 92.7%를 차지하는 데 비해 2위 교역국인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약함.¹¹⁾
 - 2016년 기준 북한의 5대 교역국: 중국(92.7%), 러시아(1.2%), 인도(0.9%), 태국(0.8%), 필리핀(0.7%) 순
- 2000년 이후 북·러 무역은 2005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러시아의 경제 악화, 중국 대비 북한과의 국경 통상구 및 인프라 시설 등 부족,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적 낙후성 등에서 기인

그림 1.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2000~17년)

(단위: 만 달러)



자료: 2000년은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17년은 ITC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01~17년 북한의 대러 제1위 수입품인 광물성 연료¹²⁾의 누적수입액(11.6억 달러) 비중은 누적 총 수입액(17.1억 달러)의 67.9%를 차지함.

- 주요 광물성 연료(HS 27) 수입품으로는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HS 2710)), 석탄(HS 2701)이 있는데 광물성 연료 누적수입액에서 각각 62.0%, 34.2%를 차지함.¹³⁾
- 광물성 연료(HS 27) 외에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누적수입액 기준 보일러·기계(HS 84, 4.1%), 일반차량(HS 87, 3.6%), 펄프(HS 47, 3.4%), 철강(HS 72, 2.9%) 등이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 2016년 기준 광물성 연료(HS 27), 전자기기(HS 85), 보일러·기계(HS 84), 일반차량(HS 87), 플라스틱(HS 39) 순인 북한의 대중국 5위 수입품과 유사성을 보이며 북한 내 필요한 물품 사정에 따른 결과로 추정

9) 2017년 북한의 수산물(HS 03) 수출은 2016년에 비해 100% 감소하였음. 수산물의 대북 수입을 금지한 UNSCR 2371이 2017년 8월(17.8.5) 결의된 점을 감안할 때 수산물 수출 감소폭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통계자료를 통해 대조·검토한 결과 일치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특별한 검증방법이 부재하므로 이를 받아들여기로 함.

10) 2017년 북한 대외무역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11) KOTRA(2016), p. 12.

12) 품목별 데이터는 2001~17년 기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2000년의 경우 품목별 데이터가 부재.

13) 최근 3개 연도에서는 북한의 시베리아산 석탄 수입이 증가하면서 석탄(HS 2701) 수입량이 역청유, 원유 제외(HS 2710) 수입량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01~17년의 기간 동안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수입 상위품목의 순위는 매년 변화를 보였으나 대부분 10% 내외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임.

표 2.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 상위품목(2001~17년)

(단위: %)

순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1	광물성 연료 (25.2)	광물성 연료 (87.1)	광물성 연료 (87.6)	광물성 연료 (70.9)	광물성 연료 (18.7)	광물성 연료 (38.5)	광물성 연료 (42.1)	광물성 연료 (83.1)	광물성 연료 (83.1)
2	보일러 기계류 (15.0)	펄프 (4.0)	보일러 기계류 (2.1)	철강 (6.1)	일반차량 (15.2)	곡물 (15.1)	보일러 기계류 (22.1)	목재 (4.1)	동식물성 유지 (4.0)
3	철강 (12.1)	비료 (1.9)	펄프 (2.0)	기타 (5.7)	펄프 (14.0)	철강제품 (6.2)	일반차량 (9.3)	곡물 (3.5)	어패류 (3.3)
4	일반차량 (11.9)	철강 (1.5)	철강 (1.3)	펄프 (4.8)	밀가루 (12.2)	밀가루 (4.8)	밀가루 (3.7)	밀가루 (2.9)	밀가루 (3.2)
5	광학/의료 기기 (5.2)	목재 (1.4)	목재 (1.1)	목재 (4.2)	목재 (6.8)	시멘트 (4.2)	시멘트 (3.6)	식물성 수액 (2.6)	철강 (1.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연도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HS코드 2단위 기준.

자료: ITC.

■ 2001~17년 북한의 대러 제1위 수입품목은 전자기기임.¹⁴⁾

- 동 기간 누적총수출액(1.97억 달러) 대비 전자기기(HS 85)의 누적수출액(0.37억 달러) 비중은 18.9%를 차지함.
- 전자기기 외에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누적수출액 기준 보일러·기계(HS 84, 16.0%), 의류; 편물 제외(HS 62, 9.4%), 플라스틱(HS 39, 7.5%), 토석류·소금(HS 25, 5.6%) 등이 있음.
- 북한은 무연탄, 철광석, 수산물 등 1차 생산물을 거의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는데 이 같은 요인이 북한의 대러 수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적자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됨.¹⁵⁾
 - 북한은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그동안 1차 생산물을 주력 상품으로 하여 수출해왔으나 러시아에서는 북한의 1차 생산 물에 대한 수요 미미
-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3년부터 의류(HS 62)가 북한의 1대 수출품목을 차지한 점이며 과거 높은 순위였던 보일러·기계, 전자기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함.
 -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 섬유 부문으로 옮겨감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
 - 2009년 북한의 섬유 수출은 6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7.5억 달러로 급격하게 상승¹⁶⁾
 - 수입품목에서 섬유(원단, 의류부자재) 부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중국과 달리 의류임가공 수출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14) 품목별 데이터는 2001~17년 기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2000년의 경우 품목별 데이터가 부재.

15) KOTRA(2016), 중국의 경우 해당 세 가지 품목(HS 03, 26, 27)이 2016년 기준 대북 수입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HS 62)와 전자기기(HS 85)가 각각 14.1%, 9.3% 차지.

16) MBC(2017).

표 3.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 상위품목(2001~17년)

(단위: %)

순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1	보일러 기계류 (24.3)	보일러 기계류 (19.2)	보일러 기계류 (33.3)	전기기기IV ·VTR (31.4)	전기기기IV ·VTR (23.1)	토석류·소금 (20.9)	의류 (편물 제외) (41.4)	의류 (편물 제외) (30.0)	의류 (편물 제외) (32.0)
2	인조 팔라멘트 섬유 (15.8)	전기기기IV ·VTR (17.0)	전기기기IV ·VTR (27.6)	보일러 기계류 (19.1)	플라스틱 (15.8)	화학공업 생산물 (14.2)	사계 (13.8)	야패류 (29.4)	약기 (26.8)
3	전기기기IV ·VTR (15.1)	바금속제 공구 (6.6)	인조 스테이플 섬유 (9.9)	인쇄물 (12.9)	보일러 기계류 (14.5)	의류 (편물 제외) (13.5)	보일러 기계류 (12.2)	약기 (19.0)	화학공업 생산물 (9.8)
4	항공기 (7.3)	광학 /의료 기기 (5.5)	플라스틱 (6.8)	유리 (7.9)	선박 (11.5)	보일러 기계류 (11.0)	전기기기IV ·VTR (4.5)	인조 팔라멘트 섬유 (4.7)	플라스틱 (5.7)
5	인조 스테이플 섬유 (7.0)	철도차량 (5.4)	일반차량 (4.7)	플라스틱 (7.1)	고무 (6.9)	선박 (9.2)	일반차량 (3.8)	전기기기IV ·VTR (4.5)	의류 (편물 포함) (5.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연도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HS코드 2단위 기준.

자료: ITC.

■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에서 중앙 연방관구, 시베리아 연방관구, 극동 연방관구¹⁷⁾ 등 세 지역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함 (2015~17년 기준).¹⁸⁾

- 북한의 대러 무역에서 시베리아 연방관구가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 연방관구, 극동 연방관구가 2, 3위를 번갈아 차지함.
- 시베리아 연방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최근 북한이 해당 지역으로부터 석탄(HS 2701)을 대량 수입하기 때문임.
 - 러시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나진-하산 구간 철도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해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항으로 운송해 중국 등으로 수출¹⁹⁾
- 한편 중앙 연방관구에서는 역청유; 원유 제외(HS 2710), 밀가루(HS 1101), 의약품(HS 3004) 등, 극동 연방관구에서는 석탄(HS 2701), 대두유(HS 1507), 역청유; 원유 제외(HS 2710) 등을 주로 수입
- 반면 북한의 대러 수출에서는 시베리아 연방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앙 연방관구, 극동 연방관구, 북서 연방관구의 비중이 높음.

17) 러시아는 8개의 연방관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음.

18) 러시아 행정구역별 통계자료의 부재로 본 연구에서는 2015~17년 3개년만 분석.

19) RFA(2017. 11. 9).

표 4.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 상위 3위 연방관구(2015~17년)

(단위: 만 달러, %)

연방관구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앙	2,371	28.1	811	10.9	846	10.9
시베리아	4,562	54.1	5,582	74.7	5,141	66.0
극동	1,286	15.2	825	11.0	1,507	19.4
합계	8,218	97.4	7,217	96.6	7,494	96.2

자료: 러시아 연방세관 무역통계(Federal Customs Service, Customs Statistic of Foreign Trade), <http://stat.customs.ru/apex/f?p=101:2:739465550515143::NO:::>

나. 경제협력

■ 북·러 경제협력은 1990년 소련 해체 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201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음.

-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가 양측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 소강상태에 빠짐.
- 김정은 체제 출범(2012.4)과 푸틴 3기 행정부 출범(2012.5)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발표(2013.5)를 계기로 개선됨.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부채 탕감, 루블화 결제 방식 도입, 철도·전력·가스관 사업 논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고위급 인사 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경제협력은 여전히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5. 북한·러시아 수교 이후 분야별 체결 협정

체결 분야	협정	체결일자
국경	국경협정	1985
에너지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정	1985
	전력 분야 협력 협정	2015.12.30
관광	상호 여행협정	1997.01.24
과세	이중과세방지협정	1997.09.29
수의	수의학 협력 협정	1997.10.14
임업	임업 협력 협정	1999.12.28
관세	관세협정	2003
운송	자동차 운송협정	2015.04.14
식량	식량협정	2015.04.14
항공	항공협정	2015.09.05
어업	어업협정	2016.05.19

자료: 내외신 언론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 경협사업 협의 채널은 고위급을 중심으로 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위원회'이며, 앞으로 이 위원회가 북·러 경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1967년 10월 북·러 합의하에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창설되었으나 소련 해체 이후 중단됨.
- 1992년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로 개칭하고 1996년 4월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 8차 회의 까지 진행됨.²⁰⁾
- 제7차 회의(2015.4)에서는 러시아 가스프롬이 북한 송유관 연결에 관심을 보였으며, 라오(RAO)는 북한에 20MW급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함.

표 6.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개최 시기 및 주요 내용 정리

시기	주요 내용
2000년 10월 3차 회의	북·러 간 나진-하산 철로 개·보수 합의
2007년 3월 4차 회의	북한 노동력 이용문제, 세관 분야, 임업, 공업 협력
2011년 8월 5차 회의	북·러 간 가스관 및 철도 연결, 나진-하산 협력, 러시아 채무 탕감문제
2014년 6월 6차 회의	북·러 간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북한의 구소련 부채 99억 달러 탕감) · 2014년 6월부터 루블화로 교역결제, 북한 내 광물매장지 공동 개발 합의 · 북측, 북한 내 러시아 투자자들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허가
2015년 4월 7차 회의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교육과학기술 등 협력 분야 논의 · 러: 함경북도 나선과 청진, 함경남도 단천, 강원도 원산-금강산 등 동해안 지역에 전력 공급 · 북: 함경북도 온성 구리광산 개발권 러시아 측에 제공 방안 제시
2018년 3월 8차 회의	북·러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확대 논의 · 북·러 간 직통 운송로 확보를 위한 대교 건설 논의

자료: 이용화(2015)²¹⁾ 및 언론자료 종합하여 저자 작성.

■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탕감'에 대한 양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러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북한의 채무 탕감 요청으로 북·러 간 지속적인 채무 탕감 협상을 진행함.
- 2012년 9월, 110억 달러의 채무 중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채무(10.9억 달러)는 북한이 이자 없이 2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나, 양측은 상환금을 보건·교육·에너지 분야의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데 합의하였으며,²²⁾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은 채무 탕감 협정 비준안에 최종 서명함.²³⁾
- 러시아의 북한 채무 탕감은 북·러 경협 확대 기반 조성을 통한 북·중 경협 견제책으로 해석 가능

■ 러시아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사업이자 물류 분야 핵심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활용한 남·북·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한국의 극동러시아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핵심협으로 담보상태에 있음.

20) 박정민(2015), p. 237.

21) 이용화(2015), p. 67.

22) 중앙일보(2018. 3. 22).

23) 연합뉴스(2015. 5. 14).

- 2000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한반도종단열차(TK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08년 4월 나진-하산 간 56km의 철도구간 개·보수에 합의함.
- 사업 구체화를 위해 2008년 10월 '라손콘트란스' 합작 법인을 설립함.²⁴⁾
- 2009년 북한이 러시아에 나진항 개발권을 위임하면서 러시아는 2010년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한 50년 장기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위해 90억 루블(약 2억 5천만 달러)을 투자하여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함.
- 2013년 9월 철도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7월 화물터미널을 공식 개장하여 현재 러시아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항으로 활용 중임.
- 하지만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시장을 염두에 둔 남·북·러 경제협력 추진을 기대하고 있음.

■ 북·러 간 핵심 경험 사업 중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이는 것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로(TKR) 연결사업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물류·문화·관광 교류의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남·북·러 철도 연결로 연간 50만 개의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운송수입은 각각 4억 달러,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²⁵⁾

■ 러시아가 추진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철도 현대화(포베다 프로젝트)²⁶⁾를 연계한 사업은 투자자원 부족과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중단되었으며, 대북제재 완화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0월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는 북한에 20년간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3,500km 길이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포베다(승리) 프로젝트'에 합의함.
- 사업비용은 러시아 기업이 북한의 희토류, 금속류, 석탄 등 지하자원을 채굴, 판매한 자금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임.
- 러시아는 기술과 설비를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러시아는 나진-하산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주요 북·러 경험사업인 가스관 연결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으며, 이후 러시아는 한국, 북한과 각각 양자협상을 진행함.
-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2015년부터 750만 톤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양해각서를 체결²⁷⁾하였으나 북핵문제로 중단된 상태임.
- 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사업에 합의하였으며, 9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은 북한과 양해각서를 체결함.

24) 라손콘트란스(RASONCONTRANS)는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 70%, 30%의 지분 보유.

25) JPNEWS(2012. 8).

26) POVEDA는 '승리'를 의미.

27) SBS(2011. 8. 20).

- 러시아 이루쿠츠크-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지역 자원을 개발하여 한국과 북한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북한은 연간 1억~1억 5천 달러의 고정적인 중계수수료 수입 획득, 한국은 중동산 LNG에 비해 저렴한 러시아산 PNG 수입이 가능함.
- 그러나 사업 추진에 있어 가스관 건설비용(특히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북·러 두만강 접경지역의 새로운 '우정의 다리' 건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북·러 우정의 다리는 1959년에 건설된 철교로 노후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임.
- 북·러 간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경우, 중국을 경유하던 북·러 무역이 직접적인 북·러 무역으로 대체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북·러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3월 제8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에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위한 업무팀을 조직하는 것에 합의함.
- 새로운 우정의 다리는 철도 교량이 아닌 자동차 교량으로 △ 현재 철도 교량을 개·보수하여 차량열차를 병행 이용하는 방안 △ 새로운 자동차 전용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 △ 건설비가 저렴한 부표교를 설치하여 계절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됨.
- 알렉산드로 크루티코프 극동개발부 차관은 2018년 6월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장비, 자재, 기술적 조건, 공사기간, 인력 등 세부 항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²⁸⁾

■ 러시아는 자국 내 풍부한 전력자원을 지원하는 한편, 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구리광산 개발권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동해안 지역(함경북도 나선, 청진, 함경남도 단천, 강원도 원산-금강산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신에 함경북도 온성의 구리광산 개발권 소유 방안을 제시함.²⁹⁾
- 2015년 11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북·러 전력 분야 협력 협정 체결을 지시함.
- 러시아 국영 수력발전회사 루스기드로의 극동지역 자회사인 라오동부에너지시스템(RAO Energy System of East)은 2015년 10월 부레이수력발전소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보스토치나야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전력을 남한과 북한에 공급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증함.
- 러시아가 15억 루블(313억 원), 북한이 20억 루블(417억 원)을 투자하여 63km(러시아 접경-나진 45km, 연해주지역 18km 전력선 부설)에 이르는 전력망을 건설하고 2017년까지 60MW를 송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북핵문제로 중단됨.³⁰⁾

28) 뉴스1(2018. 5. 3).

29) 연합뉴스(2015. 5. 14).

30) 노컷뉴스(2016. 9. 22).

다. 북한 노동자 파견

■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지역 북한 노동자(별목공) 파견은 1967년 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북한 김일성 주석의 블라디보스토크 회담(1966년 5월)에서 체결된 협약을 기초로 함.³¹⁾

- 러시아 하바롭스크 베르흐네부레인스키지역에 1만 5천 명/년을 별목공으로 파견
- 1985년 협약에서 2만~2만 5천 명/년으로 파견인원이 증대되고 하바롭스크를 포함한 아무르주로 확대됨.
- 1991년 북·러는 상기 두 지역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여 러시아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별목, 목재가공, 산림복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 및 별목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재체결함.

■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인력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말 기준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약 37,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 별목, 농업, 어업, 봉제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371호, 2397호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극동러시아 체류 북한 인력의 대다수가 2019년 말 비자가 만료되어 귀국해야 하는 상황임.
- 최근 미국 WSJ은 러시아가 제재 이후에도 약 1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에만 7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신규 고용됐다고 보도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제재 전 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함.³²⁾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2012년 이후 회복 중인 북·러 관계 개선에 부침이 있었으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어 여건이 조성될 경우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하여 대내적으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을 지정, 조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남·북·러 가스관·철도·송전선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북·러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러시아도 이를 위해 2012년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북·러 관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를 활용한 남·북·러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31) 김학기(2014), p. 63.

32) 아시아경제(2018. 8. 4).

- 북·러 간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은 무역 규모 확대 및 경협사업 발굴임. 북·러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현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경제, 특히 인접지역인 라선시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북·러 경협 확대는 북한지역 개발에 주변국이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다자간의 북한 리스크 분담,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정 분담, 남·북·러 삼각 경협사업 추진 가능 등의 장점이 있음.
- 반면 북한 북부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선점,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한·러 경쟁의 불가피 등의 단점도 있음.

■ 2018년 하반기의 북·러 수교 70주년 기념행사와 북·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기념행사 및 정상회담 개최] 2018년 북·중(3.25~28, 5.7~8), 남·북(4.27, 5.26), 한·중·일(5.9), 북·미(6.12), 한·러(6.22), 중·러(9.13) 간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북·러 70주년인 올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³³⁾될 것으로 전망됨.
 - 푸틴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러시아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언급³⁴⁾
 - 또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분쟁 가능성을 후퇴시키고 동시에 북한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평가³⁵⁾
 - 푸틴 4기 행정부 출범으로 '신동방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경제건설 총력 집중', '새로운 경제발전의 전략적 노선 채택' 등으로 대북제재 완화 시 중단된 북·러 경협의 재개 및 확대 발전 가능성 큼.
- [소규모 기념행사 개최 및 정상회담 미개최] 북·러 수교 70주년 행사는 소규모로 치러지고 이후 경제협력 관계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정상 간 회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일정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대북제재 기조 속에서도 북·러 고위급 인사 교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개최 등의 교류는 지속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시 철도·에너지(가스)·전력 분야에서 남·북·러, 남·북·중·러 다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간 상이한 법·제도의 통합 방안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외교적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러시아, 중국 등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인적교류를 통한 철도, 도로, 전력 인프라 등 제분야 협력 논의와 공동연구 등 많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북경협 사업에 있어 선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 중국, 러시아 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남·북 간 경협 논의 추진과 병행하여 중국, 러시아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 선행한 북한과의 경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추가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KIEP

33) 러시아비즈(2018. 8. 28).

34) 이데일리(2018. 6. 22).

35) 연합뉴스(2018. 6. 14).

참고문헌

[국문자료]

- 박정민. 2015. 「김정은 시대 북·러 경제협력」. 『현대북한연구』, 제18권 제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이동형. 2002. 「북러관계 발전의 성격고찰: 2000~2002년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이용화. 2015. 「최근 북러 경제협력 특징과 시사점」. 『통일경제』, 2014년 제2호. 현대경제연구원.
 장덕준. 2014.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 『러시아연구』, 제2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KOTRA. 2016. 「2016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온라인 자료]

- 「WFP, 러시아 북 식량해결에 공헌」. 2014. 『노컷뉴스』. (11월 6일). <https://www.nocutnews.co.kr>(검색일: 2018. 9. 10).
 「러시아, “북한경유 한국전력공급 송전망 사업 계속 추진」. 2016. 『노컷뉴스』. (9월22일). <https://www.nocutnews.co.kr>
 (검색일: 2018. 5. 17).
 「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대북 수출량 95% 증가」. 2017. 『RFA』. (11월 9일). <https://www.rfa.org>(검색일: 2018. 5. 23).
 「文대통령-푸틴, 한러 FTA협상 개시 국내절차 착수 합의(종합)」. 2018. 『이데일리』. (6월 22일). <https://www.edaily.co.kr>
 (검색일: 2018. 6. 25).
 「북·러, 자동차 전용 두만강 다리 건설 6월부터 협의」. 2018. 『뉴스1』. (5월 3일). <https://www.news1.kr>(검색일: 2018. 9. 10).
 「북·러, 전략적 이익 동반자..새시대 맞고 있어」. 2014. 『데일리NK』. (6월 9일). <https://www.dailynk.com>(검색일: 2018. 9. 10).
 「〈북·러정상회담〉 김정일이 내놓을 선물은」. 2011. 『JPNEWS』. (8월 20일). <https://www.defence21.co.kr>(검색일: 2018. 5. 16).
 「〈-러 밀월〉 중국혁명 북한, 러시아 손 잡았다」. 2015. 『연합뉴스』. (5월14일). <https://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8. 5. 17).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 농업협력에 가속도」. 2014. 『연합뉴스』. (11월 14일). <https://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8. 9. 10).
 「북한 핫라인 ‘북 의류섬유 수출 급증」. 2017. 『MBC』. (2월 6일). <https://www.imnews.imbc.com>(검색일: 2018. 5. 10).
 「어떤 논의할까..남·북·러 ‘가스관 사업’ 탄력받나?」. 2011. 『SBS 뉴스』. (8월 20일). <https://www.sbs.co.kr>(검색일: 2018. 5. 24).
 「중국과 멀어지고 러시아에 밀착하는 북한」. 2018. 『중앙일보』. (3월 22일). <https://www.joonang.joins.com>(검색일: 2018. 5. 17).
 「푸틴, 방러 김영남 면담..“북미 정상회담 결과 높이 평가”」. 2018. 『연합뉴스』. (6월 14일). <https://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8. 6. 25).
 「CNN, 북·미회담 재개, 러시아에 이득」. 2018. 『코리아뉴스타임즈』. (5월 28일). <https://www.kntimes.co.kr>(검색일: 2018. 5. 29).

- 「제4차 동방경제포럼 러중 정상회담 개최..시진핑 주석 처음 연해주 방문」. 2018. 『러시아비즈니스』. (8월 28일). <http://www.rbiznews.com>(검색일: 2018. 8. 28).
- 「러시아, 北노동자 신규 고용? 대북제재 위반 안했다」. 2018. 『아시아경제』. (8월 4일). <http://view.asiae.co.kr>(검색일: 2018. 8. 20).
- 「북주민, 이달 시행 러 극동지역 전자비자 신청 '전무」. 2017. 『RFA』. (8월 29일). <https://www.rfa.org>(검색일: 2018. 8. 30).
- 「북한인 16만 명 전자비자로 러 극동지역 입국」. 2018. 『RFA』. (4월 5일). www.rfa.org(검색일: 2018. 8. 30).
-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2013. <http://www.mid.ru>(검색일: 2018. 9. 17).

[통계자료]

- 세계무역센터 트레이드 맵(ITC Trade Map). <https://www.trademap.org>(검색일: 2018. 5. 14).
- 한국무역협회(KITA). <https://www.kita.net>(검색일: 2018. 5. 10).
- 러시아 연방세관 무역통계(Federal Customs Service, Customs Statistic of Foreign Trade). <https://www.stat.customs.ru> (검색일: 2018. 5. 14).